

트럼프 귀환과 기후환경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다시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다. 당선이 확정된 후, 지금까지 트럼프 뉴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다. 내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면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또한 외교 안보와 통상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될지 또한 한반도 남북의 대치 국면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그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국제정세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에 의하면 트럼프 1기 시절로의 회귀가 분명하다. 긍정적 변화라 말할 수 없다. 지난 트럼프 1기 시절 그는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며 기후위기도 기후과학도 부정했다.

유엔이 합의했던 '파리기후협정'도 탈퇴했고 심지어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기후변화'라는 단어도 없었다. 바이든 등장 이후 이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진전된 정책을 세웠으나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바이든 시대의 정책을 지워 나갈 것이다.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 등 지구촌 기후

환경 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우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석유개발을 찬양하며 'Drill, Baby, Drill(뚫어라, 자기가 뚫어)'을 외쳤다.

미국의 육상과 해상, 특별히 알래스카의 북극권이나 자연보호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대선 당선자로 확정된 순간, 연설에서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석유 개발을 통해 값싸게 에너지 문제를 이겨낼 것'이라며 석유를 '액체 황금(Liquid Gold)'이라고 표현했다.

기후위기를 '사기'라고 했던 과거와 변함이 없다. 태양, 바람 등 재생에너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히 바이든 정부의 해상풍력 지원정책을 '녹색 새로운 사기(Green New Scam)'라고 했다. 전기차 보급 정책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의거 '화석에너지로부터의 전환'을 채택했지만 그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에 정책은 바이든 정부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집권 청사진을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이 분야의 정책도 그려져 있다. 내년 임기 시작되면 또다시 미국은 유엔이 채택한 '파리기후협정(2015년 채택)'을 탈퇴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노력을 포기하고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의무적 조치를 무시하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년 제정, 기후위기대

응법으로 재생에너지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규정)도 폐지 내지는 형태화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및 관련 산업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도입은 어려워지고 석유 가스산업이 융성할 것이고 핵에너지도 부활을 꿈꿀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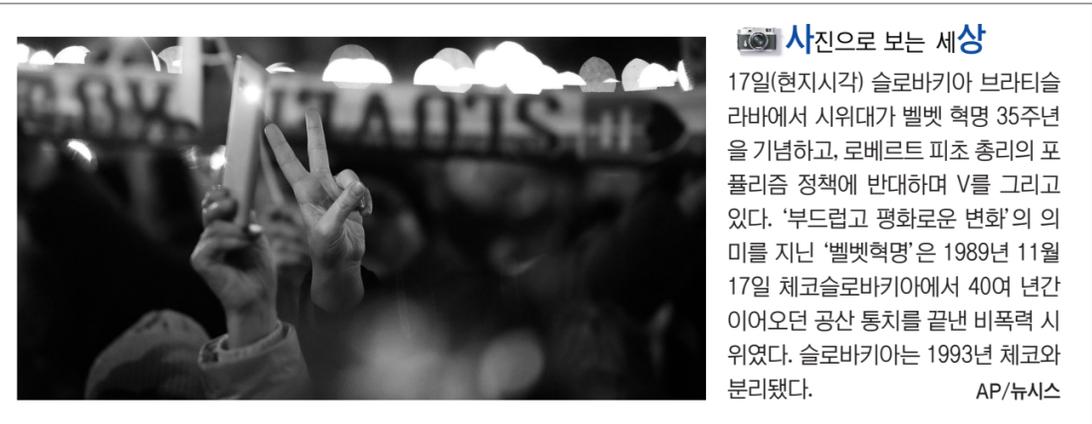
기후와 재생에너지, 환경생태계 등을 담당할 연방정부 부처나 산하기관들은 대폭 축소 혹은 폐지될 것이다. 환경보호청(EPA), 에너지청, NASA(미항공우주국)와 NOAA(국가해양대기청) 등에서 각종 프로젝트나 연구와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기후환경 분야의 베테랑 공직자들이 대량으로 쫓겨날 것이다.

청정대기와 수질과 토양, 생태계 등을 보호와 보전을 법률 규정이 각종 개발을 허용하도록 완화될 것이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게 했었다.

미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누적 배출 세계 1위 국가이며 세계 1위의 경제 군사 강국이다. 이런 미국이 기후환경에 반하는 정책을 가겠다는 것은 확실한 큰 충격이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에 거대한 숙제이다.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추종하는 나라와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NGO들과 환경론자들은 이미 트럼프 2기의 기후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해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트럼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의 미래'로 묵묵히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7일(현지시각)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시위대가 벨벳 혁명 35주년을 기념하고, 로베르트 피초 총리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며 V를 그리고 있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변화'의 의미를 지닌 '벨벳혁명'은 1989년 11월 17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40여 년간 이어오던 공산 통치를 끝낸 비폭력 시위였다. 슬로바키아는 1993년 체코와 분리됐다. AP/뉴시스

서석대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구 유출 현상은 단순히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661명과 736명이 순유출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청년이 와야 지역이 산다

광주와 전남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20대 청년들의 급격한 유출이다. 광주에서는 순유출 인구의 41.5%, 전남에서는 67.1%가 20대였다. 이는 그들이 성장 가능성과 기회가 부족한 고향을 떠나,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대는 교육과 취업,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탈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지역 사회의 문제이자 지방소멸의 서막이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역 내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지역

에 머물고 싶어도, 그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인구 유출 문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비수도권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은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이 아닌, 질 높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창업 지원이나 혁신 산업 육성, 지역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송민섭 취재2부 기자

충장로 활성화 소비자 유치 초점 맞춰야

구역별 이득 따져선 결코 안돼

'호남 최대 상권'인 광주 충장로는 충분한 소비자 유입 기반을 갖춘 만큼, 특화된 전략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동구와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이 지난 15일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에서 '광주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충장상권 정체성 찾기'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비층 유치 전략, 상인회 결속, 정책 일원화,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충장로 3가 일원에 대규모 민간투자에 나서는 ㈜시너지타워의 자체 분석이 주목을 받았다. 시너지타워는 첨단 시리단길과 진월 보이저를 통해 상권활성화를 이끈 장본인이다. 시너지타워 측은 충장상권은 여전히 기초체력이 탄탄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동구청 의뢰로 충장로에서 인공눈을 뿌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2000년대 초반 풍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너지 측은 상가공실은 전국 상권이

저한 문제인 만큼, 활성화 전략을 소비자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한시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지원사업이 끝나면 지원금이 끊기는 만큼, 상인회가 재단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성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인회의 결속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상권 활성화 사례를 보면 대다수 상인회들이 소수 상인회끼리 실익을 놓고 싸우다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이다.

광주 동구 충장로는 호남 최대 상권이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삼정 수나 종사자 규모가 광주 1위를 기록했다.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도 반환점을 돌았다.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결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충장로 상인회가 주축으로 상권 변역을 위한 결속과 다양한 변화를 위한 시도도 절실하다. 소비층의 지갑을 열 마인드가 아닌 충장로 구역별 상가 이득만 따진다면 충장로의 변역은 결코 가져올 수 없다는 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절대 용납 안 될 노동자 최저기준 위반

법 무시한 고의 위반 엄벌해야

광주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고의·상습 체불 특별·기획감독 결과 감독 대상인 지역 중소기업과 건설업체 전부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이지만 많은 기업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18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벌인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결과 지역 내 대상 사업장 51곳 모든 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장에서는 총 25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임금 체불 규모도 1164명에 31억 2000여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실제 한 기업은 용역대금을 지급 받고도 퇴직금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1억 33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일근로수당을 당직 명목으로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그야말로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

대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질서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원초적 권리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입장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도 헌법과 노동법의 원칙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로 전락한 현실에서 노동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노사관계 또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정립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할값 소모품처럼 노동자를 대하고 노동자의 원초적 권리도 무시돼 왔다. 이번 고의·상습체불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위치가 가져온 예고된 결과인 셈이다.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청은 특별·기획감독을 대폭 확대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체 사업체에 대한 현장 감독도 엄격하고 꾸준하게 이뤄져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일상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독버섯을 키워내는 방안에 다름 아니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